버려진 밤 껍질이 가죽으로… 충남형 사회적기업 17곳 육성

지역 문제, 사업 모델로 연결
3년간 사회적경제기금 신청 가능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지역 현안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섰다.

충남도는 최근 제2차 충남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보령 '발전노동자재생에너지협동조합' 등 17개사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 등 기본 요건을 갖췄지만 수익 구조 등 일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으로, 향후 요건을 보완하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지역이 직면한 문제와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사업 모델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령 발전노동자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운영과 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노동자 직무 전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한다. 지난 9월 보령 지역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시범사업을 수주했으며, 현재 고용 인원 0명에서 내년 6명, 2029년 2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홍성 '온기로'는 농촌 빈집 문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기업이다. 지난 8월 설립해 홍성읍 오관리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지난달 17일 농촌민박시설 '온기로스테이 1호점'을 개장했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에 지역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빈집 소유주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소득 증대와 빈집 방치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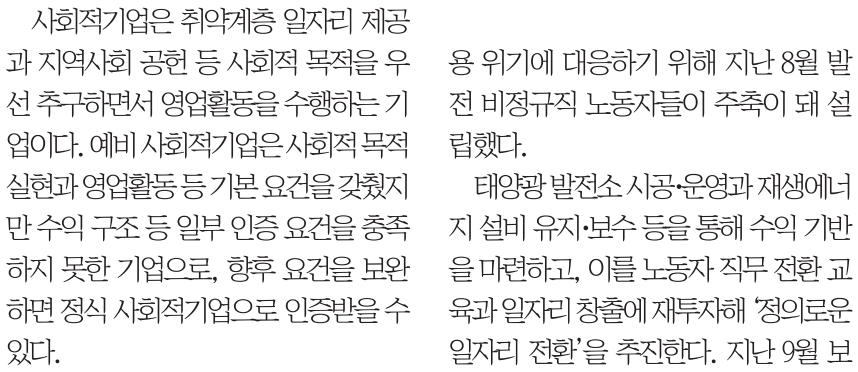
공주 '베일리'는 지역 특산물인 밤의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껍질(율피)을 활용해 친환경 식물성 인조가죽 원단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가방과 액세서리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특허 출원과 아마존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도 추진 중이다. 향후 원료 전처리와 생산·검수·포장 공정에 지역 취약계층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신청 자격을 부여받고, 청양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 컨설팅, 유통·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도 보완 사항을 안내해 재도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필 충남도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고령화, 빈집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라며 "각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KAI와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우주항공·방산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사천시

사천 우주항공·방산 육성에 1.5조 투입

사천시-산업부-경남도-진주시-KAI
전문 인력 양성하고 공급망 구축

경남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주항공·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KAI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첨단 우주항공·방산 분야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사천시는 23일 경남도청에서 산업통상부, 경남도, 진주시, KAI와 '우주항공·방산 첨단 산업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I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민간 항공기 개발 기술 확보와 항공부품 국산화,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 중심의 공급망 구축도 추진한다.

사천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고, 경남도는 투자 전담창구 운영과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규제·인허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정부도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전략'과 연계해 동남권 핵심 성장엔진인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천(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업 AI 혁신 본격화

경남대·지역 산업기관 협력

경남대학교와 지역 산업지원기관들이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돕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경남대 산학협력단은 23일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원산학융합원과 함께 구성한 제조AX산학혁신파크사업 추진단이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와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 AX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제조기업들이 생산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제조AX산학혁신파크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 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입주 기업들의 AI 전환을 위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

광주시, 팔당상수원 7개 시군 공동 대응

"규제 희생에 정당한 보상해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이 주민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23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용인특례시, 이천시 등 6개 시군과 함께 '팔당상수원 관리 지역 시군 상생 협의회'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팔당상수원 관리 지역에 적용되는 중첩 규제와 주민 지원 문제를 개별 시군 차원이 아닌 공동 현안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참여 시군들은 수질관리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오랜 기간 이어진 규제에 비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상과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팔당상수원 관리 지역은 수도권 약 2천600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 보호 구역이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고시와 수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돼 왔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아 왔다.

문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역의 부담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8년 한강 수질개선 특별대책에서 제시된 지원 중심 정책과 수익자 부담 원칙, 지역의 자율적인 개발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7개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 지원사업 개선, 수질오염총량제 등 과학적 수질관리 체계를 활용한 규제 합리화를 비롯한 6대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경기)=유진채 기자 yujin@

경북도, 무장애 관광에 국비 62억 확보

전국 최다 열린관광지 선정

경북도가 2027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에서 국비 6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포항·경주 권역은 전국에서 한 권역을 뽑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에, 김천·의성·청송 관광지 9곳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공모는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지 접근성과 이동 편의, 정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북에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에 선정된 권역은 포항·경주가 처음이다.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전국 30곳 중 경북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이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포항·경주에는 2027년부터 3년간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80억 원을 투입한다. 포항역과 경주역을 중심으로 포항영일대·죽도시장·보경사 등과 경주 관광특구 시내·보문·불국지구를 잇는다.

휠체어 탑승 특장버스 2대와 리프트 미니밴 4대를 시간 단위 또는 종일 예약제로 운영하고 승하차 거점 10곳을 정비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박용선 시장, 산림환경대상 수상



박용선 포항시장(사진)이 23일 포항시산림조합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경북권역 자치부문 상을 받았다.

지역 여건에 맞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시민 생활권 녹지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 8월 산림청장과 기북면 탑정리 항공방제 현장을 찾아 방제 상황을 살피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청양군

'SNS 대상' 유튜브 최우수상

청양군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와 군민 중심의 소통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청양군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2026 올해의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군) 분야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SNS 대상'은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 등 매체별 SNS 활용도와 콘텐츠 경쟁력, 대국민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청양(충남)=양대승 기자

순창군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영예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 2024년과 2025년 행안부 장관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앙부처 30개, 공공기관 67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순창군은 최영일 군수를 중심으로 지휘부부터 실무자까지 전 부서가 참여하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창(전북)=정봉철 기자 jbc6746@

남양주시

신도시 건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들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왕숙·왕숙2·진접2지구와 양정역세권 등 주요 신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자재. 장비.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현대건설 등 20개 시공사가 참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관계자도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